

찌아찌아족 한글 채택 10년 흐지부지 안되고 오히려 확산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부족어 표기법으로 채택한 지 10년이 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만7천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본래 사용 언어가 700개에 이르렀지만, 로마자로 표기하는 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뒤 소수 민족 언어가 급감하는 상황이다. 찌아찌아족도 독자적 언어는 있지만, 표기법이 없어 고유어를 잃을 처지였다.

찌아찌아족은 한국의 '한글 수출' 1호 사례로 꼽힌다. 부톤섬은 인도네시아의 동남 술라웨시주에 있다. 부톤섬 인구 50만여 명 가운데 찌아찌아족이 7만여 명을 차지하며 이들은 바우바우시의 소라올리오 마을, 바따우가군, 빠사르와조군에 모여 살고 있다.

바우바우시는 지난 2009년 훈민정음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소라올리오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수업하도록 했다. 찌아찌아족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수업을 받는다. 다만, 찌아찌아어를 한글 교재로 배우는 것이다.

가령, '안녕하세요?'를 인니어로 쓰면 'Apa kabar?'(아빠 까바르)이지만, 찌아찌아어로 쓰면 '마옴 빠에 올렐'

레'가 된다.

라 오데 아루사니 바따우가군 군수는 "바따우가군 인구의 80%가 찌아찌아족"이라며 "우리도 바우바우시처럼 적극적으로 찌아찌아어 한글 교육이 보급되길 바란다."며 "지금은 소수 반만 수업을 받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더 많은 학교에서 한글 수업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글을 가르칠 교사를 찾는 일이다. 한글 도입 첫해에는 교재 집필에 참여한 현지인 아비딘 씨가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듬해인 2010년 3월 파견된 정덕영(58)씨가 유일한 한국인 교사로서 10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다. 정 씨는 찌아찌아어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바우바우시 제2고등학교 1학년~2학년, 바따우가고등학교 1학년~3학년을 가르치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정 씨는 "학생당 일주일에 한 시간씩밖에 못 가르치지만, 현지 초등학교는 한 학년, 고등학교는 한 학기이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며 "언어교육은 노출 빈도를 얼마나 늘리느냐와 연속성이 중요한데, 한국에서 혼자 교사로 나와 있다가 보니 그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 지소미아 종료 우려

일본 언론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우려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 개수를 과장하는 데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개수를 2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2발 발사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개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미사일 개수를 잘못 공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북한) 미사일 대응에 필요한 탐지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오판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 주변에

서도 발사 초기 단계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실토했다고도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며 "지소미아는 11월 22일까지 유효하지만(이번 발사 당시) 양국 협력이 불충분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가 없어도 타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보다 서둘러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10분 쯤 북한의 동해안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7시 27분 쯤 일본 시마네현 도고 섬 인근 바다의 북부 350km 지점에 있는 일본 EEZ에 낙하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50km, 최고 고도는 약 900km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 국민 3명 중 1명 꼴 '빈곤층'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오래 이어지면서 국민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연합뉴스'가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번한 바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지난 30일, 올해 상반기 기준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35.4%였다고 밝혔다. 도시와 농촌 거주 국민을 모두 합쳐 1천580만 명이 빈곤층인 셈이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8%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1년 사이에 34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극빈층 비율도 7.7%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빈곤율은 2007~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라나시온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14세 이하 아동 중 절반 이상(52.6%)이 빈곤층이라는 점이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지난 8월 아르헨티나 예비선거 이후 더욱 악화한 경제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내년 3월 발표될 하반기 빈곤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당시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예상 밖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 폐쇄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했다. 물가 상승도 이어져 서민들의 끼니 해결조차 어려워지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식량 비상사태로 보고 저소득층 식량 보조를 확대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국이였다. 그러나 여러 대내외적 이유로 20세기 중후반부터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경제 위기가 오래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매체인 암비토는 1974년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5년 만에 빈곤층 비율이 8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빈곤율이 발표된 후 마크리 대통령은 "불행히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시인하며 "고통스럽긴 하지만 더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